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시장

(3분기) 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착공과 기성의 감소세가 심화
(4분기) 경기진작 기대감과 물량 우려가 상존, 의미있는 반등은 어려울 전망

전문건설시장

(3분기) 계약액 감소 추세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가 부진
(4분기)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주택시장

(3분기)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지속
(4분기) 소비심리지수·주택가격전망지수를 고려하면 주택시장 보합세 전망

🔍 이슈 진단

1. 지역간 건설경기 양극화 현황 점검

2024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2. K-모듈러 건축시장 규모와 발전 방향

모듈러 건축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

3. 신축매입입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가능성 점검

최근 LH 신축매입입정 실적은 55.1% 수준, 참여 유인책 등 제도 마련 필요

4.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와 시사점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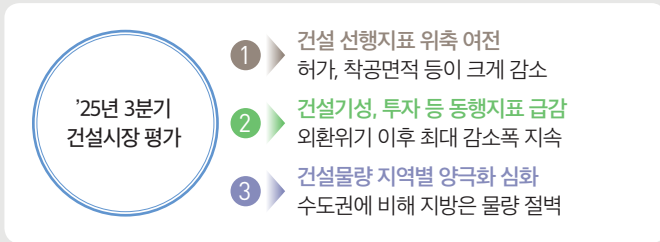
거시 경제 여건

- ▶ 한국은행은 수정 전망(2025.08.28.)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
 - 세계경제는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지만, 관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국내는 추경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
 - 그러나 건설투자 침체 기간과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낮추고 있는 실정
- ▶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성장률은 부진이 완화될 전망
 -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구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 글로벌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완화 - 소비 및 기업심리 개선 - AI 관련 반도체 경기 호조	- 무역갈등 재격화 및 확산 우려 - 국제금융시장 불안 - 건설부문의 경기 부진 지속
물가	- 기상여건 악화 - 소비 개선세 확대	- 세계 원유공급 확대 -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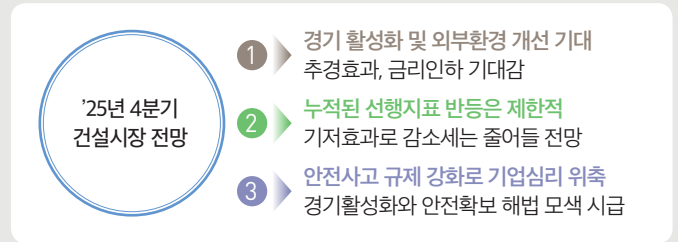
건설 시장

건설시장 2025년 3/4분기 동향



- ▶ 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착공과 건설기성 등 동행 지표 감소세가 심화

건설시장 2025년 4/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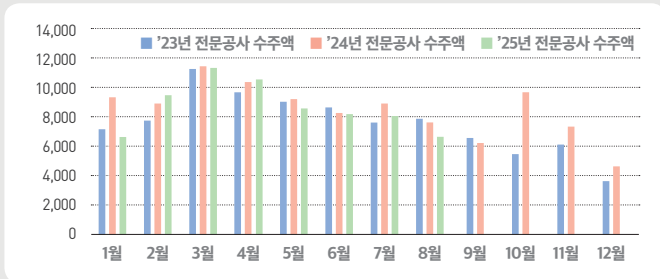
- ▶ 경기부양 기대감과 물량 절벽 우려가 상존하며,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

전문건설 & 생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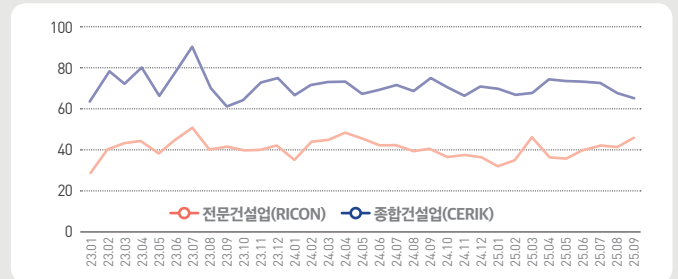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3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 및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하도급 계약액이 10% 이상 감소
- ▶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정체 수준으로 업계의 부정적 심리 상황을 반영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

(단위: 십억 원)



종합 및 전문건설업 BSI 추이



주택시장

주택시장 2025년 3/4분기 동향

주택가격	전국	소폭 상승
	수도권	
	서울	국지적 상승세
	지방	소폭 하락
종 합		지역별 차별화 뚜렷

- ▶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포함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지방은 하락

주택시장 2025년 4/4분기 전망

주택수급지수	임대차시장 불확실성 증대
소비심리지수 및 주택가격전망	가격상승 기대감 둔화 시장 안정국면 진입 전망
종 합	보험·안정흐름 전망

- ▶ 소비심리지수·주택가격전망지수 모두 하락세, 4분기 주택시장 보험세 전망

건설시장

“2025년 3/4분기 건설시장: 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착공과 건설기성 등 동행지표 감소세가 심화”

- 2025년 7월까지 발표된 건설지표는 연간 뚜렷한 반등없이 지속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부진이 장기화
 -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1.0% 늘어나 보합 수준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 7월까지도 16.5% 감소
 - 물량기준 선행/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은 기저효과로 작년 18.6% 증가했으나, 올해 7월까지도 12.8% 감소
 - 금액기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작년 2분기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까지 18.6% 급감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아파트 분양물량은 작년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 7월까지 9.8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9만호 감소
- 건설경기기는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모두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하반기 이후 건설수주와 함께 착공물량의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
 - 한국은행과 KDI가 8월 수정전망에 제시한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한국은행 -8.3%, KDI -8.1%)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98년 (-13.2%) 외환위기 시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성장률

주요 건설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7월 누계
건설수주(경상)	-18.3	-10.4	20.7	26.8	9.7	10.9	1.1	-5.1	22.4	1.0
건설기성(불변)	7.8	4.0	-3.1	-9.1	-9.7	-4.7	-21.2	-17.4	-14.2	-18.6
건축허가면적(연면적)	-25.6	-17.2	-16.4	-9.9	8.4	-9.2	-23.4	-8.5	-19.0	-16.5
건축착공면적(연면적)	-31.7	15.2	33.1	40.3	-4.2	18.6	-29.8	-5.7	16.5	-12.8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21.1	5.8	5.8	5.7	7.7	25.0	2.3	4.7	2.8	9.8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2025년 4/4분기 건설시장: 경기부양 기대감과 물량 절벽 우려가 상존하나,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

- 새정부의 추경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4분기 건설시장은 이전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건설경기는 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물량도 확대되면서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여기에 금리인하 기대감과 부동산PF 불확실성 감소 등 건설업의 외부 환경에 우호적인 신호도 감지
- 그러나, 그간 누적된 착공물량 감소세 등을 감안하면 건설경기 부진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건설 선행지표와 동행지표는 각각 시차가 존재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 여기에 최근 건설산업 안전사고 규제 강화에 따라 전국 곳곳의 공사현장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어 건설지표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동시에 현장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모색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
- 결과적으로 4분기 건설시장은 이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

최근 건설경기 긍정 및 부정적 요인 종합

건설경기 긍정 요인

- 새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대
-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
- 공사비 상승 완화
- 수익성 일부 회복 예상

건설경기 부진 요인

- 허가 및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
- 기성, 투자 등 동행지표 급감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심리 악화
- 부동산PF 불확실성 여전
- 지역 건설경기 침체 및 양극화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락폭은 줄어들 전망



부정적 요인에 따라 반등세는 제한적 수준

건설경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상황

전문건설시장

“2025년 3/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했으며,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5년 7월 8.2조원, 8월 6.8조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및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
 - 특히, 원도급에 비해 하도급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감소하면서 전문건설업 부진을 주도
 -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8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능인력의 직접고용이 많은 전문건설업계의 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

2025년 3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

시 기	구분	추정 수주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5년 7월	전문건설업 전체	8,154	-9.1	-1.5
	원도급공사	3,058	-4.1	+8.2
	하도급공사	5,096	-11.8	-6.5
'25년 8월	전문건설업 전체	6,756	-13.1	-9.6
	원도급공사	2,220	-2.7	+4.5
	하도급공사	4,536	-17.4	-15.3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5.7~'25.8)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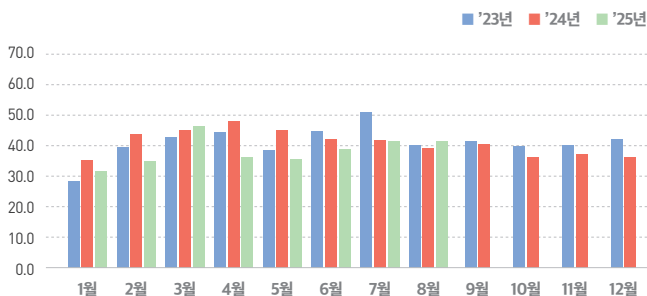
“202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환경 저해요인 개선이 필요”

- 건설경기 전반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부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전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업황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현재 건설경기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침체폭이 가장 큰 상황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역시 매우 어려운 시기
 - 따라서 업황 회복과는 별도로 전문건설업 사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시점
 - 전문건설업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능인력의 수급난과 인건비 부담, 종합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충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노란봉투법 등 건설노조 문제 등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

“2025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정체 상황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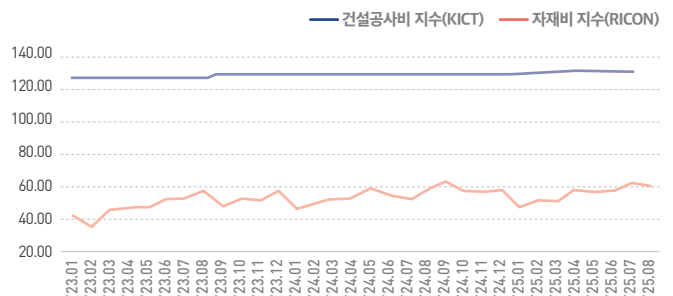
- 전문건설업체의 3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최저치를 보인 올해 5월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40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러한 업계의 심리 악화는 4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새정부의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는 존재하나, 최근 안전사고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지연, 중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황 심리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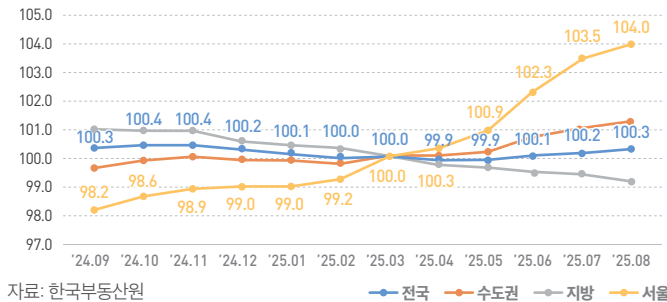
구분	'24년 11월	12월	'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별 전망	41.6	37.4	26.3	38.2	47.0	43.9	41.4	39.1	43.1	48.0
월별 평가	37.4	36.8	32.1	35.0	46.5	36.8	35.8	39.4	41.9	41.6

주 택 시 장

“ 2025년 3/4분기 주택시장: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포함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지방은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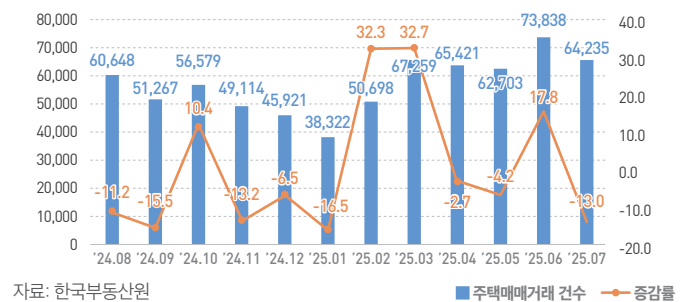
- **(주택가격) 6.27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상승세, 지방은 하락세**
 -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5년 5월 대비 8월)를 살펴보면, 전국은 0.4%, 수도권은 1.1%, 서울은 3.0% 상승한 반면, 지방은 0.3% 하락하여 지역별 차별화 뚜렷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발표 직후의 안정화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
- **(주택매매거래) 6.27 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활발한 거래량 유지**
 - 최근 3개월(5월~7월) 동안 월평균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약 6만 6천 건으로 올해 초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
 - 특히,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17.8% 증가한 약 7만 3천 건의 거래가 발생
 - 그러나 6.27 대책이 시행된 7월에는 거래량이 전월 대비 약 13% 감소한 6만 4천 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6월의 이례적 거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6.27 대책의 영향이 함께 작용된 결과로 판단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5.3월 = 100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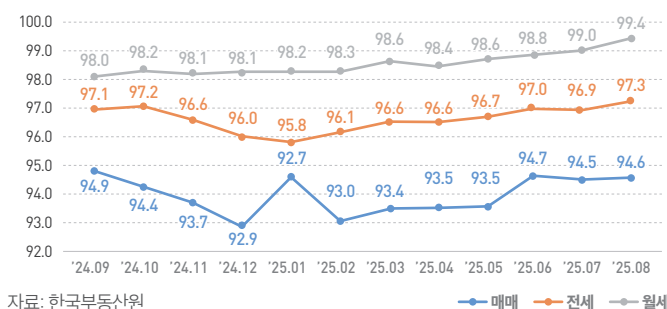
(단위: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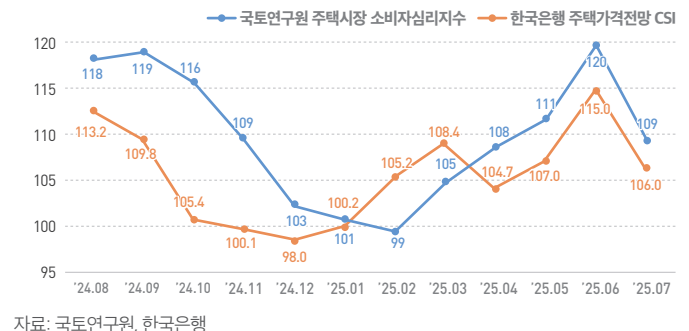
“ 2025년 4/4분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주택가격전망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4분기 주택시장은 보험세 전망 ”

- **(주택수급지수) 매매·전세·월세수급지수 모두 상승, 전세수급지수는 매매수급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5년 5월 대비 8월 수급지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매는 93.5에서 94.6, 전세는 96.7에서 97.3, 월세는 98.6에서 99.4로 각각 상승하였으나, 세 지수 모두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인 100을 상회하지는 못하는 모습
 -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까지 발표하며 주택가격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은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90%→80%)는 전·월세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향후 수요 위축과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주택가격전망)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지수 모두 5월과 6월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 정부가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어, 하반기까지 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유형별 아파트 수급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주택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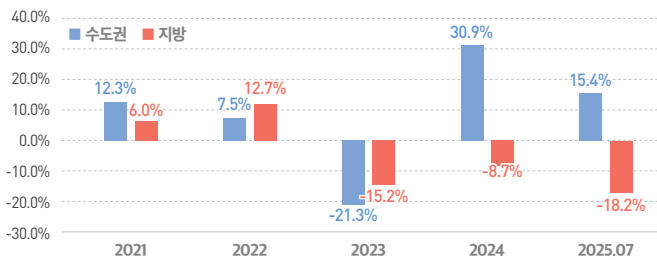


건설·주택시장 이슈 진단

이슈 1. 지역간 건설경기 양극화 현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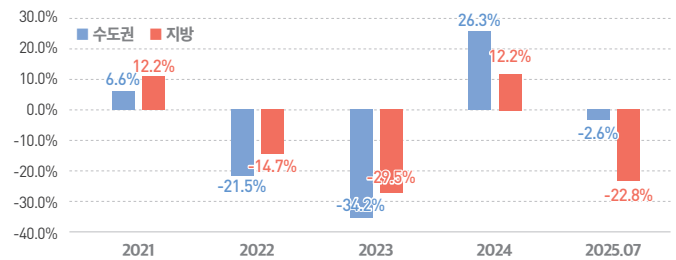
- 최근 건설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으며, 선행지표는 물론 동행지표까지 감소세가 심화
 -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 건설경기는 고사(枯死)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
- 실제로 건설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차별화가 뚜렷한 상황
 - (건설수주)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수주의 경우 2024년 이후 수도권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부진이 지속
 - 2021년 대비 2025년 7월까지 누계 건설수주는 수도권이 43.5% 증가한데 비해 지방은 24.3% 감소
 - (건축착공) 물량기준 선행 및 동행지표인 착공면적 역시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지방의 감소폭이 더욱 큰 상황
 - 2021년 대비 2025년 7월까지 누계 건축착공면적은 수도권이 32.3%, 지방이 41.6% 각각 감소
-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축으로 건설 프로젝트는 자재 구매, 인력 고용, 장비 임대와 같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후방 연계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큰 수준
 - 현재 지역 건설경기는 장기간 이어진 부진으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지역기반 중소기업 및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수주 비교(2021-2025.07)



자료: 통계청

수도권과 지방의 건축착공 비교(2021-202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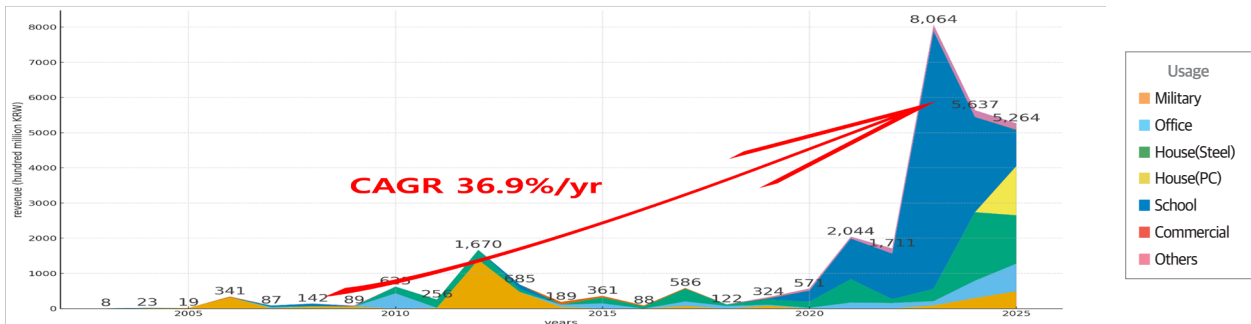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슈 2. K-모듈러 건축시장 규모와 발전 방향

-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2003년부터 2024년까지 CAGR(연평균 성장률) 36.9%의 높은 시장성장률 기록
 - 2024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 규모는 5,637억 원 규모로 추정되어 2023년 8,064억 원에서 감소
 - 학교시장의 급격한 성장 후 축소되면서 주거시설 및 업무시설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

연간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 변화

(단위: %)



자료: 조봉호, 표준형 K-모듈러 주택 기술개발 현황, 2025 스마트 건설 세미나(2025.09.17)

- K-모듈러 주택의 미래 발전 방향은 ①고층화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혁신, ②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③Zero-Carbon 시대 대응, ④해외 진출, ⑤이동 가능 주택, ⑥표준형 모듈러 주택 개발 및 적용 등이 대표적
 - K-모듈러 건축의 장점은 속도/유연성/안정적 공급망, 단점은 제도적 미흡/성공의 경험 부족/작은 시장 규모
- 모듈러 건축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내화 기준 합리화, ②모듈러 건축 특성을 고려한 발주/감리/보험 제도 개선, ③공기단축/안전확보/제로카본 등 사회적 혁신에 대한 정량화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이슈 3. 신축매입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가능성 점검** ”

-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09.07.)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공급 방식 중 하나로 ‘신축매입임대’ 14만 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 특히, 전체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7만 호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 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4년간 LH의 신축매입임대 실적을 점검
 - **(매입임대주택 실적)** 신축매입약정이 본격화된 ’21~24년까지 총 7.9만 호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2.0만 호 수준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최고 76.8%에서 최저 24.3%로 평균 달성률은 약 55.1% 수준
 - **(현실 가능성 평가)** 정부는 LH를 통해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7만 호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최근 LH의 매입임대주택 실적 추이를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신축매입임대 공급은 제도 취지상 필요성은 크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착공 물량 감소, 신축매입주택 고가 매입 논란, LH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원 조달 한계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당
 - 따라서 단순한 목표 설정만으로는 현실적 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한 제도 보완, 안정적 자원 확보, 건설사 참여 유인책 등 구체적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 (단위: 호)

구분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매입		합계	전체 달성률(%)
		호	달성률(%)	호	달성률(%)		
2021	목표	28,880	70.2	15,014	52.7	43,894	64.2
	실적	20,262		7,908		28,170	
2022	목표	29,166	49.4	10,043	22.1	39,209	42.4
	실적	14,397		2,224		16,621	
2023	목표	22,197	24.3	4,264	4.0	26,461	21.0
	실적	5,392		171		5,563	
2024	목표	50,190	76.8	4,363	17.2	54,553	72.0
	실적	38,531		751		39,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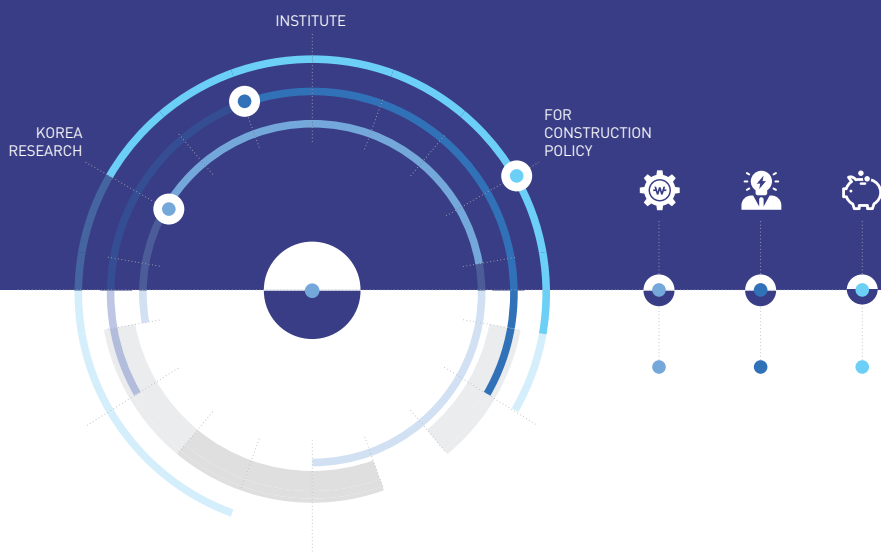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2019년~2023년), LH 발표자료(2024년) 각각 인용

“ **이슈 4.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와 시사점** ”

- 1980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사업부지의 매각과 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의 약 600여개 조합이 산재해 있는 실정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 전국 252개 조합에서 다수의 법령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 미작성’ 등이 다수
 - 이밖에도 총회의결사항 미준수, 조합원 모집광고 위반, 자금보관 대행 위반, 회계감사 미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 이번 정부당국의 실태점검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수순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시일에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
 - 정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인가요건 등을 강화했으나 이후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함과 동시에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의 비교

구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조합
목적	무주택자 등이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	노후주택 등 사업지의 주거환경 개선
조합원 자격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 소유자(청약통장 불필요)	사업지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다주택자도 조합원 가능)
가입방식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발적 참여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개별 소유주의 사업동의 여부에 무관)
토지확보	사업지확보는 조합설립 이후의 목표 (토지매입 실패시 사업 무산)	사업지의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원이므로 토지확보 100%로 시작
공공성	재개발만큼의 공공지원은 없음 (분담금 반환/손해배상/공사비 증액 등)	최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장애요인	토지매입 실패, 사업진행단계에서의 추가분담금, 불투명한 사업진행 등	조합 내부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5. 9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정대운, 고하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07071
TEL 02-3284-2600 | FAX 02-3284-2620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